



## 근절되지 않는 연구비 부정사용

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만 541억원

- 민병주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‘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’에 따르면,
-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, 정산 과제 71,567개 중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331개(0.46%)임.
  -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의 총 연구비는 5,804억원이었으며, 그 중 **실제 부정사용된 연구비는 3년간 총 541억원인 것**으로 나타났다.
- \* <표1.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> 참조

<표1.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>

(단위 : 개/억원)

정산년도	정산 과제 수	부정사용 과제 수	비중	부정사용 과제 총 연구비	해당 과제 연구비 부정 사용액
2010년	20,723	137	0.66%	2,401	275
2011년	24,142	101	0.42%	1,759	143
2012년	26,702	93	0.35%	1,643	123
<b>총 합계</b>	<b>71,567</b>	<b>331</b>	<b>0.46%</b>	<b>5,804</b>	<b>541</b>

\* 조사대상 부처 : 교육부, 국토교통부, 기상청, 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문화재청, 문화체육관광부, 미래창조과학부, 보건복지부, 산림청, 산업통상자원부, 소방방재청, 식품의약품안전처, 안전행정부, 원자력안전위원회, 중소기업청, 해양수산부, 환경부

- 또한,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을 부처별로 분석해보면,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정사용 과제 수가 201개로 전체 적발된 331개 중 60.7%를 차지했으며, 연구비 부정사용액 역시 398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.

\* <표2.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> 참조

<표2.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구비 부정사용 현황 >

(단위 : 개/백만원)

소관 부처	정산 과제 수	부정사용 과제 수	비중	부정사용 과제 총 연구비	해당 과제 연구비 부정 사용액
교육부 (舊 교과부 교육부서)	20,118	8	0.04%	2,248	179
국토교통부	560	7	1.25%	2,311	1,267
농림축산식품부	1,151	4	0.35%	1,357	291
문화체육관광부	205	5	2.44%	1,172	353
미래창조과학부 (舊 교과부 과학부서)	19,357	26	0.13%	36,545	656
미래창조과학부 (舊 방통위)	2,605	20	0.77%	70,728	3,690
보건복지부	2,046	5	0.24%	1,122	333
산업통상자원부	14,091	201	1.43%	443,276	39,756
소방방재청	222	2	0.90%	568	33
중소기업청	8,996	26	0.29%	6,952	2,981
해양수산부	646	4	0.62%	913	90
환경부	1,570	23	1.46%	13,179	4,511
<b>총 합계</b>	<b>71,567</b>	<b>331</b>	<b>0.46%</b>	<b>580,372</b>	<b>54,140</b>

\* 기상청, 농촌진흥청, 문화재청, 산림청, 식품의약품안전처, 안전행정부,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없음

- 해당 연구 과제의 부정 사용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환수완료되었거나 일부 환수중인 것으로 나타났음.

※ 과학기술기본법  
제11조의2(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, 연구기관·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 
5.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
- 민병주 의원은 “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&D 투자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” 이라고 지적하며,
- 이어서, “근절되지 않는 소수의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전체 과학기술인들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간주되는 풍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구비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함. /끝/